

## ‘30년 숙원’ 전남 의과대학 신설 ‘투트랙 시나리오’ 시급

### “대학 정해지면 추진” 닷새 만에 “절차 따라 신속히” 소지역주의 극복, 한 지붕 두 캠퍼스 등 숙제로 김영록 지사 정치·행정력, 전남도 전략 개발 시험대

전남 의과대학 신설 계획이 대통령 민생토론회에 이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 발표에서도 공식 언급되면서 30년 숙원이 해결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지역내 공감대를 전제로 ‘조건부 신설’과 ‘신속한 추진’을 각각 약속했고, 전남도가 ‘통합형 공동의대’를 공식화한 상황이어서 김영록 전남지사의 정치·행정력과 함께 전남도의 치밀하고 다각적인 전략과 논리 개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동·서부권 대표도시 목포와 순천의 화합과 소지역주의 극복은 물론 지역특화형 의대, 한 지붕 두 캠퍼스, 공공의료 사각지대인 영·호남 지자체 간 연대 등 다각적인 ‘투트랙 전략’이 필요할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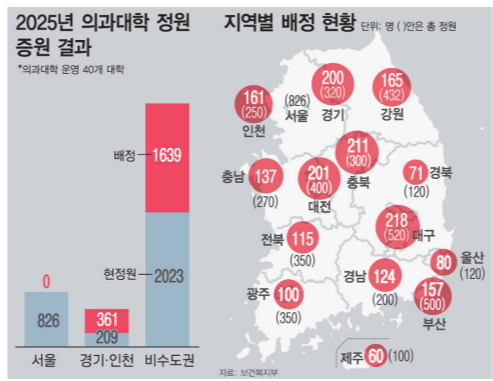
정부는 20일 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2006

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18년째 유지되고 있는 국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확정했다. 광주에 위치한 전남대와 조선대에는 각각 75명, 25명 등 모두 100명이 배정됐다.

선과 농·어촌이 밀집한 전남의 의대 신설에 대해선 “지역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신속하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건부) 추진’ 약속에 따라 당장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전남 의대 신설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던 전남도로서도 답답이 나오지 않은 데 다소 아쉬워하면서 대통령에 이어 관련 부처에서도 “추진”을 약속한 데 방점을 찍고 “B플랜”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의대 신설 불가→검토 후 결정→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이 확정됐다. 경기·인천 대학들에 361명(18%)을 늘리고 나머지 1639명(82%)을 모두 지방에 배분했다.

(先) 대학 선정, 후(後) 정부 추진→ 의견 수렴 후 신속 추진으로 이어진 정부의 입장 변화에 주목하며 의대 유치를 위한 치밀한 전략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특장지역 ‘단독 의대’가 아닌 ‘(통합형) 공동의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남도 주재로 목포와 순천 지자체와 정치권, 의료계를 아우른 폭넓

은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충분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화형 의대’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남권(목포대)에는 노인 인구와 일반 응급환자가 많은 지역특성을 감안, 노인과 도서, 농어촌 특화 의대를, 산업단지과 생산기지가 밀집한 동부권(순천대)에는 산업 재해 특성화 의대를 만드는 게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비슷한 처지의 경북에서 안동 국립 의대는 지역 인재 육성, 포스텍은 연구중심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투트랙으로 추진 중인 점도 참조할 대목이다.

단일 의대 아래 1000km 거리의 서, 동부 2개의 캠퍼스를 운영 중인 캐나다 노던 온타리오 대학을 롤모델로 목포와 순천에 2개의 미니 의대를 운영하되, 세부 운영 계획은 디테일하게 짜는 것도 고민해볼 대목이다.

인구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한 목포대와 순천대 간 국립대 통합도 장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1972년 설립된 특수대의인 일본식 ‘차치 의

대제’와 ‘권역별 공공의대’도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가뜰이나 열악한 지자체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여기에 공공의료와 의대 신설 전담부서가 제각각인 점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하나의 의대에서 넘쳐나는 의료수요를 모두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규모가 다소 적더라도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형 의대를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전남지역 한 병원장은 “전남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곳으로, 의대가 없다 보니 증원이나 통계를 아예 없고, 의료인 수급도 동맥경화”라며 “의대 신설도 넓은 의미에서는 증원의 만큼 정부의 전략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의대가 없는 전남에도 도민 건강을 지킬 거점 의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 장관까지 ‘전남 의대’에 긍정적 입장을 밝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임택기자

**제47회 보성군민의 날**  
5. 3. (금) 보성공설운동장  
군민 화합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

**제19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  
5. 4. (토) 8:00 ~ 16:00  
보성공설운동장  
플. 하프, 10km, 5km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5. 4. (토) ~ 5. 6. (월)  
보성문화예술회관 일원  
전국 판소리·고수 경연대회, 추모제

**제102회 어린이날 행사**  
5. 5. (일) 보성군 일원  
먹거리, 체험마당, 놀이마당 등

**제20회 일림산 철쭉문화행사**  
5. 4. (토) ~ 5. 6. (월)  
웅치면 용반리 일림산 일원

**제2회 보성데일리콘서트 with 드론쇼**  
5. 4. (토) ~ 5. 6. (월)  
농협마트 주차장(보성역 옆)

**2024. 5. 3. ~ 5. 7. 한국차문화공원 일원**  
보성 차(茶)를 활용한 공식행사, 특별행사, 기획행사, 차 문화체험, 전시 / 공연, 공연 등

● 주최 / 주관 보성차생산자 조합 | 보성다향대추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보성군,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



“도롱뇽 알을 찾았다!” 평두메습지 탐사  
20일 ‘람사르습지 등록 기원 탐사대’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광주 북구 평두메습지에서 울챙이와 개구리를 찾아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광주 북구는 평두메습지가 국내 26번째 람사르습지로 등록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 대학별 의대 증원 배분 발표 광주·전남 의사단체 즉각 반발

정부가 2000명이 늘어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를 발표하자, 광주·전남 의사단체들이 즉각 거세게 반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안에서 전남대는 기존 정원보다 75명이 늘어 의대 정원이 총 200명으로 늘어

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며 “사태를 이렇게 까지 만든 정부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는 25일로 예고된 전국 의대 교수 사직 행렬에 동참할 지 고려 중인 지역 의과대학 교수들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전남대 의대는 전임교원 180여 명이 향후 의대 증원 정책 대응 방향,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여부 등에 대해 전자우편 설문 조사를 벌이고 있다.

### “논할 가치조차 없다” “정부 책임, 상황 악화될 것” 격양 전남대·조선대 의대 교수 집단행동 검토...사직 동참하나

난다. 조선대 의대는 입학 정원이 25명 더 증가한 150명이 된다.

이같은 정부 발표에 광주·전남 의사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박유환 광주시의사회장은 “정부는 시종일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추진했다. 끝내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니 더이상 논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겠다”며 비판했다.

최운창 전남도의사회장은 “오늘 발표로서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은 확정적인 사실로 굳어졌다. 결국 집단이탈 전공의들은 더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제자를 지키지 못한 교수들도 죄책감에 사직 행렬에 동참할 것이다. 최악

조선대 의대는 지난 16일 교수진 150여 명 중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사결정기구인 교수평의회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 집단 사직 동참 등을 고심하고 있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지난 19일부터 사직서를 내기 시작해 오는 25일 대학·병원으로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연세대의대와 삼성서울병원을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에서도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뜻을 모았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안 발표에 맞춰 의사단체와 전공의단체, 의대 교수들은 이날 오후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이슬비기자